

이재명 정부 “성장과 통합” 최우선 순위

■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기간 ‘성장’ ‘국민통합’ ‘경제우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1호 공약은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요약되며 인공지능, 방산산업 등 기업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민주당은 작년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을 폐지하였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도체 특별법(주52시간 상한제 예외)를 두고 갈지(之)자 행보를 하였습니다. 새 정부가 자본에 유리한 정책을 유지하고 더욱 두텁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속노조는 대선 기간 민주당에 회계공시·타임오프·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기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산별교섭 제도화, 노조와 정부 산업 정책 의제의 직접 교섭 등의 협약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핵심사항에 대해 거부 또는 핵심내용을 축소하는 입장이었고, 결국 금속노조와 민주당의 정책협약은 불발되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 운동기간 차별금지법 제정과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유보적이거나 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제 자본은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을 옥죄고(노동 유연화) 기업을 자유롭게 하는(기업규제 완화) 요구를 거세게 몰아칠 것입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反노동·反개혁·親기업으로 ‘우경화’로 향하도록 청탁하고, 압박할 것입니다. 새 정부가 양극화와 불평등, 노동의 문제를 성장과 사회통합에 장애물로 여기며, 뒷전으로 미루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反노동정책 폐기!

산업정책 노정교섭 제도화!

■ 6월 11일 금속노조 1만명 이상의 확대간부가 서울 국회앞으로 모입니다. 우리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노동법 전면 개정을 요구합니다. 국내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직접 교섭도 요구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넓히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교섭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 산업별(업종별) 교섭,

대정부 교섭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과거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었던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도 정치권에 의해 대폭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핵심이 빠지지 않는 노조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해야 합니다.

윤석열표 노조말살 정책인 회계공시 폐기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 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등 케묵은 족쇄도 끊어내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관세전쟁과 통상임금 범위확대 문제가 맞물리면서 자본의 인건비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청 대기업 수익을 위해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추악한 산업구조가 근본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재벌에게 위탁하고, 노조를 ‘패싱’ 하는 동안 국내 제조업은 황폐해졌습니다. 산별노조가 산업과 고용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구조부터 만들자는 것이 노정교섭 요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6.11 간부투쟁 → 7.16 총파업”으로 간다

■ 금속노조는 6월 확대간부 상경투쟁으로 시동을 걸고 7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갑니다. 민주노총은 7월 2주년을 총파업 기간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16일, 보건의료노조는 7월 24

일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7월 19일은 민주노총 전체 간부가 서울로 모입니다.

우리는 누가 당선되어도 투쟁이 불가피함을 대선 기간 동안 확인했습니다. 대선 하루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지 6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에 “시간을 주고 지켜보자”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의 요구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절박함이고, ‘착한 정부’를 기대하고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상대의 움직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요구하고 교섭하고 투쟁하여 관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치권을 해결사와 민원창구로 여기는 순간 노조의 ‘자율성’은 사라집니다. 계엄 이후 광장의 약속이 새로운 ‘정권’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다시 싸움을 시작할 때입니다. 🇵🇪

